“경기도 홍보비 투명하게 집행해야”

대변인·홍보기획관실 행감 예산초과 지출 ‘집중 추궁’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이혜원 의원이 홍보기획관을 상대로 질의를 하고 있다. 〈사진=김인창 기자〉

경기도 홍보비 집행에 대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집행을 요구하는 의원들의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황대호(민주당, 수원3) 의원은 이날 운영위원회(김정영 위원장) 대변인·홍보기획관실 등 소관기관을 상대로 한 2023행정사무감사를 펼치면서 “일반회계 기준으로만 보면 홍보비 지출면에서 17개 시도 가운데 8위권 수준”이라며 “이것을 1400만 인구 대비로 나눠보면 1인당 경기도 홍보비는 17개 광역시도 중 16위권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황 의원은 홍보 인력에서는 서울시에 비해 30명 가량 적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인력배치 문제를 덧붙였다.

김진욱 대변인은 이와 관련 “경기도 등록매체는 민선7기 시작때인 지난 2016년 무렵 800여 개이던 것이 민선8기 들어 현재 2390여 개로 3배 가량 늘었다”면서 “이들 중 미운영에 따른 문제부 통보매체가 200여 개이고 이들 가운데 한해 122개를 폐간 조치했고, 나머지 90곳에 대해서는 정비중”이라고 밝혔다.

황 의원은 “지역 언론 활성화를 위해 우리 경기도와 언론이 손잡고 가야한다”면서 “투명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보기획관실에 대해서는 올해 예산 사업을 집행하면서 항목을 바꿔가며 예산 목적외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기도의회로부터 집중 추궁을 당했다.

최근 운영위 배정을 받아 첫 행감에 나선 국민의힘 소속 이혜원(양평2) 의원은 이날 올해 경기도는 지하철 행선 안내기, 공공버스 래핑, 극장 스크린 led 전광판, KTX 및 SRT 주요 이슈 매체 홍보 등 9개 옥외매체에 27억7800만원을 편성해 11월 말 현재 6억5900만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이들 매체 중에 아파트 미디어 홍보 항목을 문제삼았다. 이 의원에 따르면 아파트 미디어 홍보는 10억6000만원 예산안에 집행은 13억8235만원으로 예산액을 초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하철 행선안내기 매체에도 1억600만원을 편성해 2억940만원을 집행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시외버스 래핑 등 기타 매체에는 3억4800만원 예산이 구체 내용 없이 1억8300원이 전용된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 의원은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 목적 외에 사용한 것이 아닌가”라며 “예산 전용을 한 사유가 뭐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이원일 홍보기획관은 “옥외광고비 항목 내에서 효과가 좋은 매체 위주로 예산을 융통성 있게 사용하다보니 일부 조정이 있었던 것”이라며 “예산 전용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국민의힘 소속 양우식(비례) 의원은 김진욱 대변인을 향해 “오늘(11월 23일)이 연평도 포격사건일로서 큰 아픔이 있던 날인 것을 아느냐”면서 “도지사의 메시지를 내고 자료도 내고 하는 게 기본이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이와 관련 김진욱 대변인은 “미처 챙겨드리지 못해 죄송하다”고 자세를 낮췄다.

김정영 위원장은 김진욱 대변인을 향해 “경기도 기자실이 지하1층에 자리하고 있는데 도민들과의 소통을 강조하시는 도지사님인데, 도지사실을 지하실로 옮기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김인창 기자

인천 식품 산업 발전 방안 모색

인천시의회 식품연구회 식품산업 활성화 세미나

인천시의회에서 인천 식품 산업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자리가 있었다.

인천시의회 의원 연구단체인 ‘인천식품진흥정책연구회’는 23일 인천시식품산업육성지원센터에서 박판순(국민의힘, 비례) 대표의원을 비롯해 이봉락(국민의힘, 미추홀3)·박창호(국민의힘, 비례) 의원, 식품 관련 협회장, 전문가,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식품안전관리 완성도 제고’를 주제로 대구대학교 김성조 교수가 주제 발표를 했고, 이어 ‘식품 산업 육성을 위한 국가식품클러스터 역할과 사례’를 소개하는 등 글로벌 식품 산업 트랜드에 맞춘 식품 산업 육성·지원 방안에 대한 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됐다.

박판순 의원은 “식품 산업은 1인 가구 증가, 건강과 편의성 추구 등 전반적인 시장 트렌드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어 인천시 식품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실질적인 지원정책과 함께 관련 연구도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심도있는 토론을 통해 연구를 함께 해주신 인천식품진흥정책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한 마음”이라며 “이후에도 식품 관련 단체의 현장 애로사항을 수렴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등 인천 식품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종삼 기자

김주영·박상혁 “5호선 연장부터”

국힘 ‘김포 서울 편입’ 관련 5호선 예타 면제 시공 ‘우선’

김주영(왼쪽)·박상혁 국회의원이 ‘김포시 서울 편입보다 5호선 연장 사업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5일 기자회견을 가진 김주영·박상혁 의원.

김주영·박상혁 김포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이 진심으로 김포시민들을 위해 서울 편입을 추진한다면, 5호선 연장 사업부터 진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국토위 예산 심사에서 김포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골드라인 증차·5호선 기본계획 수립 예산을 증액 반영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열고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위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김포시 5호선 연장은 예타 면제로 신속한 시공이 가능해진다.

이에 양 의원들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제 남은 것은 정부여당의 결단이다”라며 “국토부는 김포시 최적안으로 노선안을 확정지어야 한다”고 기자회견했다.

이어 양 의원들은 인구 50만을 넘는 김포시의 유일한 철도가 김포골드라인임을 지적했다.

이들은 “현재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는 평균 241%, 최대 285%에 달해 5일에 1번꼴로 승객이 쓰러지는 상황이다”라고 호소했다.

앞서 서울시는 10·29 이태원 참사 이후 김포골드라인 혼잡도 완화를 위해 서울교통공사 인력을 배치해 승객들을 안내하고 3000번 버스와 M6117번 버스를 추가 운영한다는 해법을 내놨다. 또 김포시도 전세버스·수요응답형버스(DRT)를 투입했으나 혼잡도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양 의원들은 “5호선 연장 예타 면제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실제 공사까지 십 수년 걸리므로 김포시의 혼잡과 위험을 그대로 방치하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30일 김포한강차량기지를 방문해 “궁극적으로 열차를 더 늘리거나 새로운 노선을 확충하는 것이 방법이 아니겠는가”라며 “지자체 간 합의안 도출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데 당에서 적극적으로 중재를 해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다”고 전철 연장에 찬성했다.

또한 김 대표는 이날 “서울과 경계하고 있는 주변 도시들 중 출퇴근·통학이 서울과 직접 공유되고 있는 곳은 서울시에 편입하도록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도 발언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예비타당성조사 제외대상을 확대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은 입법 폭거”라고 규정했다.

이들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예타 제도는 1999년도에 민주당이 국민의 정부에서 재정의 건전성 확보와 투명한 운영을 위해 도입했다”며 민주당의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예타 완박법’이라고 지탄했다.

국힘 기재위 국회의원들은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입법 폭주를 저지른 것”이라고 힐난했다.

홍정윤 기자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DMZ오픈페스티벌 조직위 ‘월권 행위’

이혜원 의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혜원(국민의힘, 양평2·사진) 의원은 21일 경기도행정사무감사에서 ‘DMZ오픈페스티벌(DMZ OPEN Festival)’ 조직위원회의 그릇된 설립 배경을 지적하고 규정에도 어긋난 방만한 운영실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3 DMZ 오픈페스티벌’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경기 북부 각 명소에서 스포츠·학술·예술 등을 아우르는 문화행사로 경기도의 DMZ 관련 사업 예산 90억 중 54%인 49억이 투입되는 대형 사업이다.

이 의원은 “해당 사업이 경기도 평화협력국에서 경기관광공사로 위탁해 진행됨에도 공사 사업에 조직위원회가 상위조직처럼 군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근거에도 없는 조직위원회가 만들어진 배경도 불분명하고, 조직위의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예술총감독 위촉 역시 매우 즉흥적으로 이뤄졌다”고 말했다.

DMZ오픈페스티벌의 조직위원회는 경기도지사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총감독 등 20명으로 구성돼있다. 조직위원회는 해당 사업의 자문이나 회의를 담당하는 기구로 사업의 기획 및 이행 권한이 주어지진 않는다.

도교육청 총액인건비 운영 문제 제기

안광률 의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안광률(민주당, 시흥1·사진) 부위원장은 22일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총괄감사에서 교육부에서 확정해 산정한 총액인건비와 다르게 경기도교육청이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안 부위원장은 매년 교육부에서 각 교육청에 ‘총액인건비 확정산정 현황’을 통보하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실제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2년 연속으로 경기도교육청의 지방공무원 인건비가 줄어들고 교육전문직의 인건비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안 부위원장은 “2022~2023년 지방공무원의 인건비는 교육부 산정기준 대비 각각 245억, 101억이 적게 편성됐는데 반대로 교육전문직의 인건비는 지난해 114억, 올해 15억 가량이 더 편성됐다”면서 업무 관련 부서의 명확한 설명을 요구했다. 또한 안 부위원장은 “교육부 기준 대비 지방공무원의 인건비는 덜 편성되고, 교육전문직의 인건비는 더 편성되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현장의 지방공무원들은 자신들의 인건비를 줄여서 교육전문직을 늘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면서 총액인건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지방공무원들에게 이를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민간 구급차 셧다운 우려

황세주 의원

황세주(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비례·사진) 경기도의원이 22일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경기도 보건건강국을 대상으로 열린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민간 구급차 셧다운 대응 방안을 촉구했다.

황 의원은 “최근 민간 구급차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보건복지부에서 민간 협의체를 구성해 문제해결에 나서는 등 응급 환자 이송 체계에 문제점이 발견되고 셧다운 우려마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31개 시군구 민간 구급차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일부 시군은 하나의 업체가 독점하는 사례가 있으며, 담합에 의한 응급 이송 체계 교란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황 의원이 경기도로부터 ‘경기도 응급환자 이송업체 운영 실태’를 제출받은 결과 경기도가 민간 구급차 전체를 대상으로 매년 실태점검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정기 실태점검을 통해 32개소를 점검한 결과 ‘출동 및 처치기록지 관리 의무 미이행’ 2건, ‘구급차 용도 외 사용’ 1건을 적발했으며, 6개소에 대해서는 일상점검을 실시해 ‘이송업 변경허가 및 구급차 운용신고 위반’ 1건, ‘응급구조사 탑승 의무 위반’ 3건, ‘타 시도 무허가 영업’ 3건 등을 적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 속도 내야

강태형 의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강태형(민주당, 안산5·사진) 의원은 22일 농수산생명과학국 등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 종합감사에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에 관해 재차 강조했다.

강 의원은 “본 의원이 ‘속헹 씨’ 사망사건 이후 사건 재발 방지를 위해 전국 최초로 외국인근로자 인권 및 지원 조례를 발의한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며 “이후 도에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 건립에 2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완공시점이 늦어진 것은 집행부의 소극적인 행정 태도가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경상남도의 경우 지난달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착공했는데 먼저 조례가 제정된 경기도에서는 착공조차 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안타깝다”며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지연되는 사태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를 반성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한 “건립 이후에도 철저한 관리·감독은 물론 정확한 업무 인수인계를 통해 행정의 연속성과 신뢰성을 확립하는 모습을 도민들에게 보여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온 지적사항들은 충분히 검토해 조속히 개선할 수 있어야 한다”며 제시된 대안과 건의사항들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치유농장 체계적 관리·운영 강조

방성환 의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국민의힘, 성남5·사진) 의원은 22일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열린 종합감사에서 농업기술원의 치유농장 선정 및 운영 과정에 대해 지적하고, 치유농장의 체계적 관리·운영을 강조했다.

근래 다변화하는 현대사회와 급속한 고도화로 인해 치유와 회복에 대한 관심으로 치유농장이 주목받고 있으며, 관련 사업 또한 확장되고 있다. 농촌진흥청의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이 주말농장 등 치유농업 관련 활동을 할 경우 우울증이 60% 가량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으며, 발달장애인의 경우 신체 기능이 최고 70%까지 향상된다는 결과가 나왔다.

경기도 농업기술원에서도 농업·농촌의 자원을 활용해 치유농장 대표모델 육성 및 치유프로그램 보급 등의 사업을 통해 치유농업을 지원하고 있다.

지난 5월 ‘경기도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하기도 한 방 의원은 “법과 제도가 완비돼 치유농업 정책의 기반과 체계적 지원시스템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또한 방 의원은 치유농업과 관련한 신규 사업 개발 등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치유농업의 수요처 발굴과 차별화·전문화 된 경기도만의 치유농업 콘텐츠 개발 등에 적극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중화장실 안심 비상벨 오신고 심각

유영일 의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국민의힘, 안양5·사진) 위원장은 22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범죄취약 화장실 비상벨 설치사업의 효과제고를 위해 도민의 안전을 위한 현실적 대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유 위원장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요구했던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지원사업 확대 추진 상황”을 점검하며 “설치 화장실 수 증가는 긍정적이나 올 상반기 534개소의 비상벨 운영 실태분석 결과 가동건수 819건 중 위험상황 9건(1.1%), 장난·오신고 810건(98.9%)으로 장난·오신고의 비율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

경기도수자원본부 김태수 수질총량과장은 “월 1회 비상벨 설치장소를 점검하지만 주민들이 호기심으로 누르고 사라지는 경우가 많아 허위신고로 경찰들도 어려움과 부담을 겪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에 유 위원장은 “비상벨 설치로 시각적 예방효과도 있지만 허위신고를 방치할 수는 없으며 문제가 지속될 경우 실제 비상상황 발생시 벨을 눌렀을 경우 경찰이 신경쓰지 않을 것이 우려 된다”며 “오신고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인창 기자